

도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계획

최지사 문대통령과 한반도 평화거점 프로젝트 논의 2,000억 투입 현내면에 66만㎡ 북방교류센터 조성 공동시장 개설 고성지역에 한해 무비자 왕래 허용 “향후 홍콩처럼 자치권 가진 준국가적 기능 부여”

남북 평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은 고성군을 ‘동북아의 홍콩’으로 성장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 된다. ▶관련기사 2면

최문순 지사는 지난 26일 고성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후 고성 지역이 홍콩과 같은 도시가 될 것”이라며 남북 합작 도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마련된 계획으로 총 사업비만 2,000억원 규모다.

도는 국비 1,400억원을 확보한 후 지방비 300억원과 민간투자 300억원을 보태 고성군 현내면에 66만㎡ 규모의 북방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 공연장과 식당, 쇼핑시설을 갖추고 남북공동시장을 개설해 고성에 한해 무비자 왕래를 통한 관광 등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및 유엔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공동자치구 성격의 평화특구를 통해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차후에는 남북 금융, 관광, 식품산업, 카지노 등을 토대로 홍콩과 같은 준국가적 기능까지 부여하는 방안까지도 검토중이다. 남북이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는 남북일제(南北一制) 형태의 통일 쇼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따라 성사 가능성은

남북일제(南北一制)
평화특구 지정·운영



대상:남·북 고성군 전체 지역, 1,523km²

구분	남고성	북고성
면적	664.34km ²	858.657km ²
행정구역	2개읍 4개면 88개리	1개읍 23개리
인구	30,485명	61,277명

유동적이지만 분단 도(道), 분단 군(郡)에서 시범적 평화특구를 조성하는 계획은 상당한 상징성과 명분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마련한 도는 이후 북미관계가 난항을 겪자 공개를 잠시 보류했지만 1주년을 맞아 도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이와 관련, 도는 1차 관문으로 남북과 유엔의 승인, 2차 관문은 수천 억원대의 국비 확보로 보고있다.

최근 담보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걸림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26일 고성을 방문해 남북 평화의 비전을 밝힌 점은 이같은 도의 구상에 힘을 실어준다.

도 관계자는 “고성군 남북일제 프로젝트는 아직은 장기적인 비전으로 볼 수 있다”며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시 충분히 현실화가 가능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문 대통령, 적극 지원의사 표명
도, 속초~원산 크루즈 등 대비

문재인 대통령의 고성선언이 강원도 평화경제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땅길·하늘길·바닷길 등 북강원도를 잇는 3대 평화길도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고성선언을 통해 남북 강원도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항공, 항만 등이 평화경제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평화경제 로드맵과 강원도의 역할론이 병행, 추진되면서 도는 3대 평화길 개척 준비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남측 단절 구간인 동해북부선(강릉~제진·104.6km)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문 대통령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협의를 약속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향후 동해북부선과 연결, 동북아 물류 핵심인프라로 만들 계획이다.

북 원산과 평강을 잇는 춘천~철원 고속도로의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 제2경춘국도와 연계해 춘천에서부터 북측까지 뻗어나갈 도로망을 구축한다.

평화하늘길은 양양국제공항과 원산 갈마비행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두 공항간 거리는 161km에 불과, 중소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 이와 연계,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을 받게 되면 오는 10월 국내선 첫 취항과 함께 남북 강원도 하늘길 연결에도 대비하고 있다.

원산에 입항할 평화 크루즈 준비도 본격화됐다. 도는 내년 상반기 출항을 목표로 최대 2만급 크루즈를 준비하기로 했으며 화물을 함께 실어나를 수 있는 2만 5000t급 페리는 연내 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와 속초시는 ㈜한창이 추진 중인 북방항로 운항계획을 수립,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 연해주~중국 훈춘~백두산과 연결할 계획이다. 1만 7329t급의 해당 선박은 운항 면허 발급 후, 9월부터 속초~러시아 슬라비얀카, 속초~일본 기타큐슈를 운항하게 된다. 박지은

문 대통령, 강원현안 후속조치 지시

3대 신산업 등 조기해결 전망

지난 26일 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주요현안을 상세하게 파악, 현장에서 경제수석과 담당 장관에게 후속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성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비전 전략보고회와 도내 경제인 오찬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도내 각 현안을 보고받고 일부 현안은 즉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강원도 평화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혁신성장 3대 신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전기차 생산조합 중심의 상생일자리 사업과 삼척 액체수소 시범도시 조성,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최지사는 행사장에 샘플 전기차를 배치,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이 강원전기차 생산조합이 될

수있도록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을 불러 지원 방안 모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중, 광주형 일자리를 잇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자체 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문 대통령의 강원대선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도가 건의한 범정부 차원의 실무추진협의회 구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 고성 통일전망대 등 도내 안보관광지에 대한 출입절차 간소화 건의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불러 사전신고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오찬간담회장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기협의 완료를 약속했다. 김여진

건설업계 채용 전년대비 24% 줄어

지난해 8775명→6653명

관급공사 30% 감소 여파

강원 건설업계가 지난해 관급공사 수주 감소와 경기 위축 여파로 채용인원을 전년 대비 24%인 2100여명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업계의 채용인원(고시·공고 등 공개모집에 따른 취업인원)은 공사가 문을 겪으면서 8775명에서 6653명으로 2122명(24.1%) 줄었다.

지난 한해 조달청을 통해 진행된 도내 시설공사 입찰액은 7613억원으로 2017년(1조893억원)보다 3280억원(30.1%) 감소했다. 이런 경영난에 2017년 상·하반기 각각 4527명, 4248명이던 도내 건설업계 채용인원도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3079명, 3547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편 제조업계도 내수부진 여파가

커지면서 채용인원이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도내 제조업계의 채용인원도 3507명으로 2017년(3913명)보다 406명(10.3%)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관호